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 Letter

vol.100
2023. 12

정책제언 I

50년 규제 지역경제 침체, '소양댐 법' 정비해야

소양강댐 운영 관련법은 정비돼야 한다. 다목적댐 관리권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수량 기준 전국 1위인 소양강댐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받는 출연금은 적고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해 50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10조원을 넘지만 피해 보상은 1,000억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자치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피해는 최소 6조8,300억원, 최대 10조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수몰지로 인한 기회비용 상실액 연간 최대 1,133억원, 기상변화 피해 연간 최대 897억원, 소양강댐 흙탕물 방류로 인한 춘천시의 수질, 정수처리 비용 등이 포함됐다. 반면 소양강댐 건설 후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50년간 전기 생산, 용수 공급으로 올린 수입금은 9조4,33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소양강댐 주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소양강댐의 진가는 준공 후 십수 년이 지난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발휘됐다. 5억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이 상류에서 물을 최대한 가둬 주면서 한강 인도교 수위를 1.23~2m가량 떨어뜨린 덕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두 차례 대홍수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치수에 성공한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다. 상습 침수 지역이던 강남권은 농지에서 도시 주거 지역으로 개발됐다. 이수(利水)에도 성공했다.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295ℓ의 물을 쓰는데, 소양강댐이 하루 수도권에 보내는 식수는 1,356만명이 쓸 수 있는 400만톤 규모다. 수원·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며 기업이 성장한 것도 소양강댐이 보내는 공업용수가 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지고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데 있다. 소양강댐 건설로 춘천을 비롯한 양구, 인제 등 3개 지역 6개 면 37개 리가 수몰됐고,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2만3,000여명이 수몰민이 돼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반강제로 이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소양강댐 주변지역 230㎢의 면적이 축사조차 지을 수 없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발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왔다. 그리고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안개 및 서리 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도 증가했다. 농작물 피해 및 농업소득 감소,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상·재산상의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소양강댐의 공과를 명확히 평가해야 할 때다. 주민 피해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양강댐이 가진 새로운 미래 지향적 가치를 찾아 지역과 국가 발전의 기재로 활용해야 한다.

출처 : 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강원 방위산업 주도권 확보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위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강원형 방위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구미와 창원 등 영남권 중심의 기존 방위산업 체제에 대해 강원도가 특자도 출범과 함께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는 미래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장기간 쌓은 경쟁력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 규제로 개발에 발목이 묶였던 강원도가 이제는 방위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강원의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방위산업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 6대 신산업'으로 정할 만큼 유망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2020년까지 20~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다 2021년 호주와 5조원 규모의 수출계약에 성공하면서 급부상했습니다. 이어 올해 이집트와의 2조원 규모로 수출 계약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와 10조원 규모의 기본 계약을 체결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K-방산 3종 세트' 수출은 1차 계약이며, 탄약 및 후속 군수지원, 기술 이전 및 현지생산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최대 25조~40조원까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반도체와 조선에 이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 발족은 시의적절합니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방위산업협의회의 위원장은 김진태 지사가 맡고, 부위원장은 최영철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이 임명됐습니다. 협의회는 강원형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 자문하면서 도내 방위산업체의 육성과 시장 진출 지원 및 방위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방위산업 후발주자에 속하지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강원도만의 강점을 갖고 차별화된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역 발전을 주도할 신산업을 찾고 있는 강원도에 방위산업은 희망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방위산업의 범위는 방대합니다. 크게 무기 체계와 비무기 체계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강원도가 주력해야 할 분야도 많아, 전략적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산업 유치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사보호구역 등 개발 규제에 따른 침체와 불편을 감내한 강원도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마땅합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부동향

환경부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 환경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일회용품 감량 가속화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민 모두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끌기 위해 11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가 그간의 협업을 바탕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앞장서고 현장의 의견을 일회용품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 17개 광역지자체와 대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매장에서 다회용컵 사용이 정착되는 중으로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혜택 강화, 종이컵 회수·재활용 확대, 프랜차이즈 업계의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유도,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 종이컵만 규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 플라스틱 빨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 계도기간 연장, 비닐봉투는 규제를 유지하고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

□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우수매장 지정 계획과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안내하고, 공공기관 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빨대 등 대체품 사용*을 통한 탈플라스틱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내의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에게 일회용품의 제공 자제를 권고 가능

□ 회의 참석자들도 현장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요청드린다"라며, "다회용기 및 대체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정부동향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민건강 보호한다

- 한덕수 총리 주재,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
- 국민 생활공간 실내공기질 집중점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 -
-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8만톤 감축, 초미세먼지 농도 1.4㎍/㎥ 저감 기대 -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 미세먼지에 관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 참석 위원
- **민간**(15명) : 문길주 민간위원장, 장영기, 배귀남, 임영욱, 유영, 전혜영, 이미혜, 추장민, 우정헌, 이승묵, 하지원, 배민석, 박지영, 이미옥, 송미정 위원
- **정부**(12명) : 환경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 · 과기 · 문체 · 농림 · 복지 · 고용 · 해수 · 행안부차관, 산림 · 기상청장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 · 점검한다.

□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미세먼지 개선에 노력한다.

-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특히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농촌 지역은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 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감시장비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장비는 오염우심지역의 배출정보수집에 활용한다. 수집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동향

-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개선하여 배출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 ’24.3월 가동정지·상한제약 규모는 ’24.2월에 확정

  ** 노후 석탄발전기 5호기(보령#4.5.6, 당진#1.4) 설비공사에 총 2,172억원 투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20.12월~) 수도권, (‘22.12월~) 부산, 대구, (’23.12월~) 대전, 광주, 울산, 세종

-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 부산,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0.1%, 기타 모든 해역 0.5%

○ 셋째,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일시 중단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경보단계 하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공유, 성과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정보와 대기질 공동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위성, 지상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 차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경유차 조기폐차 등 여러 대책들의 정책효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저감”되었다며, “그동안 힘써온 바와 같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제5차 계절관리제에 적극 협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한 총리는 “올겨울은 대기정체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회 · 경제활동이 회복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이번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아울러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면서,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행정부는 물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와 법원, 감사원 등의 헌법기관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동향

산업통상자원부

겨울 한파대비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

- 한전·거래소·발전사 등 전력 관련 기관과 겨울철 준비상황 사전점검 -

□ 전력 당국과 전력 관련 기관은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철 기간 동안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방문규 장관)는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하에 겨울철 전력 수급관리 준비를 위한 종합 사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23. 12. 4.~'24. 2. 29.)에 앞서 전력 관련 기관이 모여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연료수급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 올겨울 전력 당국의 수급 관리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갑작스러운 북극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도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전력 수급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급작스러운 한파, 폭설로 인한 태양광 발전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료수급 상황 및 핵심설비 관리 현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 전력거래소는 작년보다 많은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한전과 발전사들은 겨울철 전력집중(피크)에 대비해 송배전·발전설비의 사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취약설비 보강 등 사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발전사들은 안정적인 연료 수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두었으며,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도 정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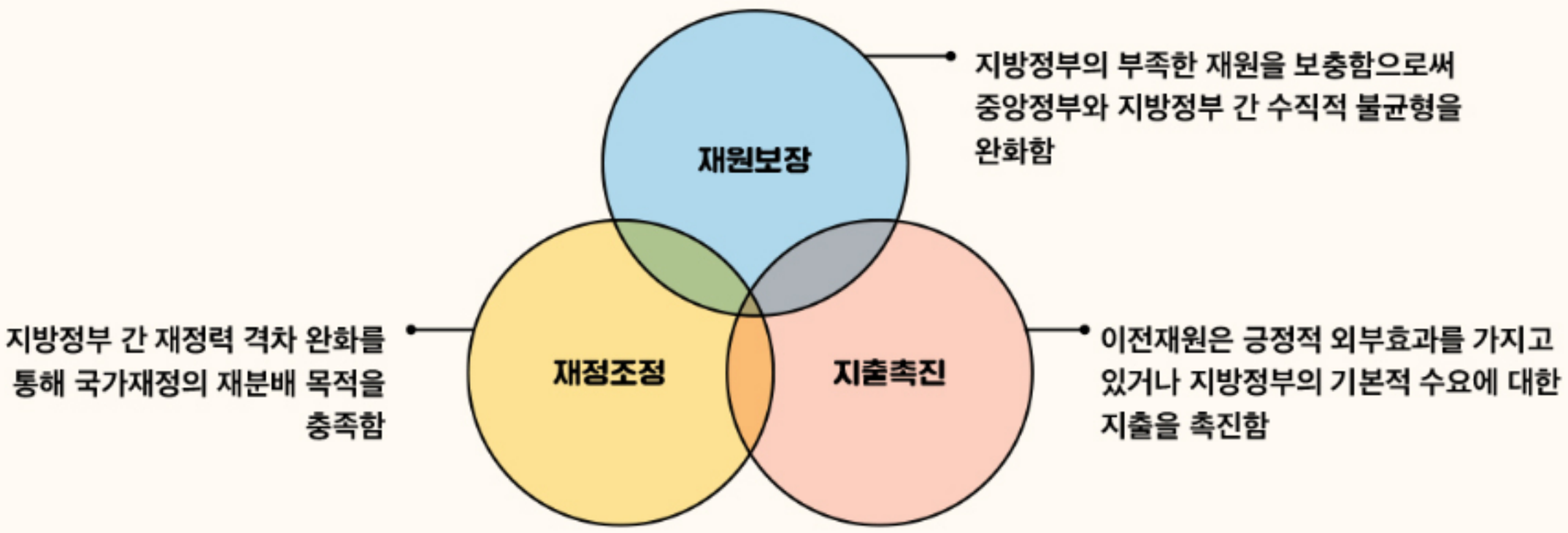
□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전력은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기간 산업인 만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히고, 참여 기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중 모든 사전준비를 마치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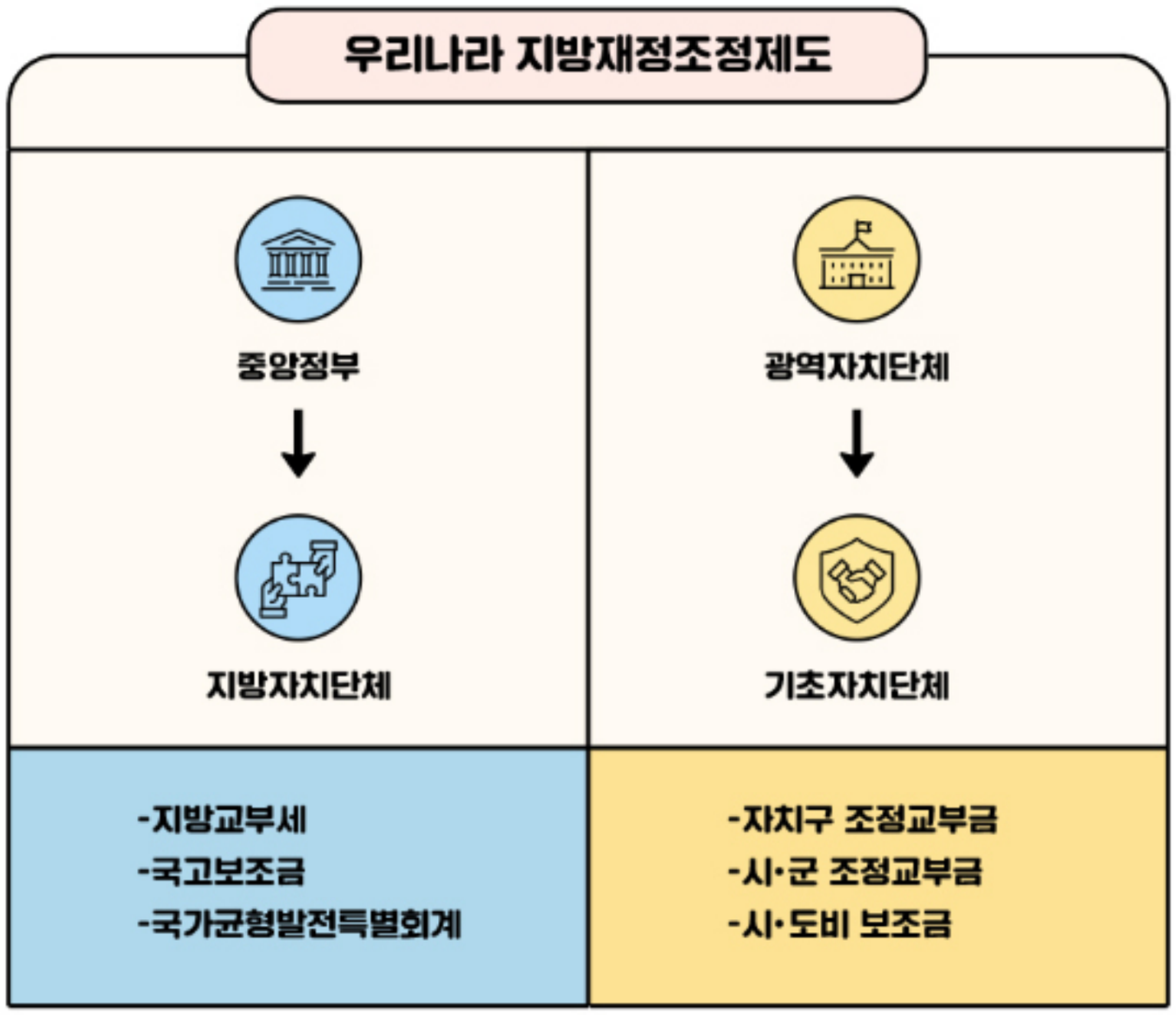
보통교부세 개편을 통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홍 근 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Smoke, 2004)



0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구분 및 재원 유형



정책브리프

• Bahl and Linn의 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이전재원 유형 •

구분		재원규모 결정방식		
		국세 일정비율	임의결정	특정사업 지출
배분 방식	조세징수주의	A (strict sharing)	L	N/A.
	공식주의	B (tax sharing)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F (균특회계 자율계정)	N/A.
	특정사업 지출	C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소방안전교부세)	G (균특회계 지원계정, 국고보조)	K
	임의적 결정	D	H	N/A.

자료 : 조기현·전성만(2019).

0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및 특성

- 현행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다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 제도 간 유사·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및 특성 •

대분류	중분류		총액규모		배분방식	정책목적	조정방식
지방 교부세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	97%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수직적
	특별교부세			3%	임의	재해복구, 지역현안	-
	소방안전교부세		당배분 개별소비세20%		공식	소방, 안전시설 확충	수직적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수직적
국고 (시·도비) 보조금	일반 보조금	법정보조	법령 규정		임의	특정사업 장려	수직적
		비법정보조	재량적				수직적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	일반회계 전입금(재량적), 주세 등 특정재원		공식	특정사업 장려	수직적
		지역지원			공식	특정사업 장려	수직적
조정 교부금	시·군	특별교부금	시·도 보통세 27%, 지방소비세 27%		임의	지역현안	-
		일반교부금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수직적
	자치구	특별교부금	시·도 보통세 일정비율		임의	지역현안	-
		일반교부금			공식	재원보장, 재정격차 완화	수직적
지역상생발전기금			수도권 시·도 지방소비세 35%		공식	재정격차 완화	수평적

정책브리프

04.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결과 비교

- 1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별적인 재정형평화 효과와 지니계수 세입원천 분해 기법을 통해 전체 재원을 동시에 고려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함
-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의 한계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니계수 분석결과 비교 : 전국 •

한계효과는 해당 재원이 1단위 증가 할 때, 지니계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함

구분	개별 효과 분석			종합 효과 분석	
	배분 전(A)	배분 후(B)	차이(B-A)	상대적 기여도	한계효과
지방소비세	0.80847	0.81674	0.00827	0.1195	0.0371
보통교부세	0.80847	0.67297	-0.13550	0.1211	-0.0834
부동산교부세	0.80847	0.76178	-0.04669	-0.0028	-0.0270
소방안전교부세	0.80847	0.80970	0.00123	0.0075	0.0027
국고보조금(차등보조율)	0.80847	0.77526	-0.03321	0.2110	0.02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80847	0.78198	-0.02649	0.0456	-0.0019
시·군 조정교부금	0.80847	0.77467	-0.03380	0.0347	-0.0122
자치구 조정교부금	0.80847	0.76795	-0.04052	-0.0052	-0.0407
지역상생발전기금	0.80847	0.80869	0.00022	0.0014	0.0005

05. 보통교부세 중심의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 방안

-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보통교부세 조정률 수준을 파악함
- 지역 간 재정력 격차에 대한 보통교부세 한계효과는 보통교부세 조정률 증가에 따라 커지다가 보통교부세 조정률 85% 이후부터 감소함

정책브리프

• 보통교부세 조정률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한계효과 •

구분	소득윈별 점유율	소득윈별 지니계수값	상관계수	소득윈별 상대적기여도	한계효과
현행 조정률	0.1889	0.5684	0.6301	0.1089	-0.0800
조정률 75%	0.1913	0.5684	0.6341	0.1111	-0.0802
조정률 80%	0.2015	0.5684	0.6502	0.1207	-0.0809
조정률 85%	**0.2114**	**0.5684**	**0.6660**	**0.1303**	**-0.0811**
조정률 90%	0.2211	0.5684	0.6825	0.1403	-0.0808
조정률 95%	0.2306	0.5684	0.6965	0.1499	-0.0806
조정률 100%	0.2398	0.5684	0.7108	0.1598	-0.0800

-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교부세 조정률을 85%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재정형평화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방안임

- 2021년 기준 보통교부세 조정률 73.851%를 85%로 인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현행 19.24%에서 22.12%로 인상 하는 것이 필요함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 Letter
vol.100
2023. 12

알기쉬운 정책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 “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11.22.

대한민국정부

불편은 줄이고
힘든 분은 돕고
어려움은 풀어드립니다

· 167건 민생규제 혁신 ·

대한민국정부

부처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국민께서 제안해주신 과제 중에서
민생규제 167건을 발굴해 혁신합니다.

작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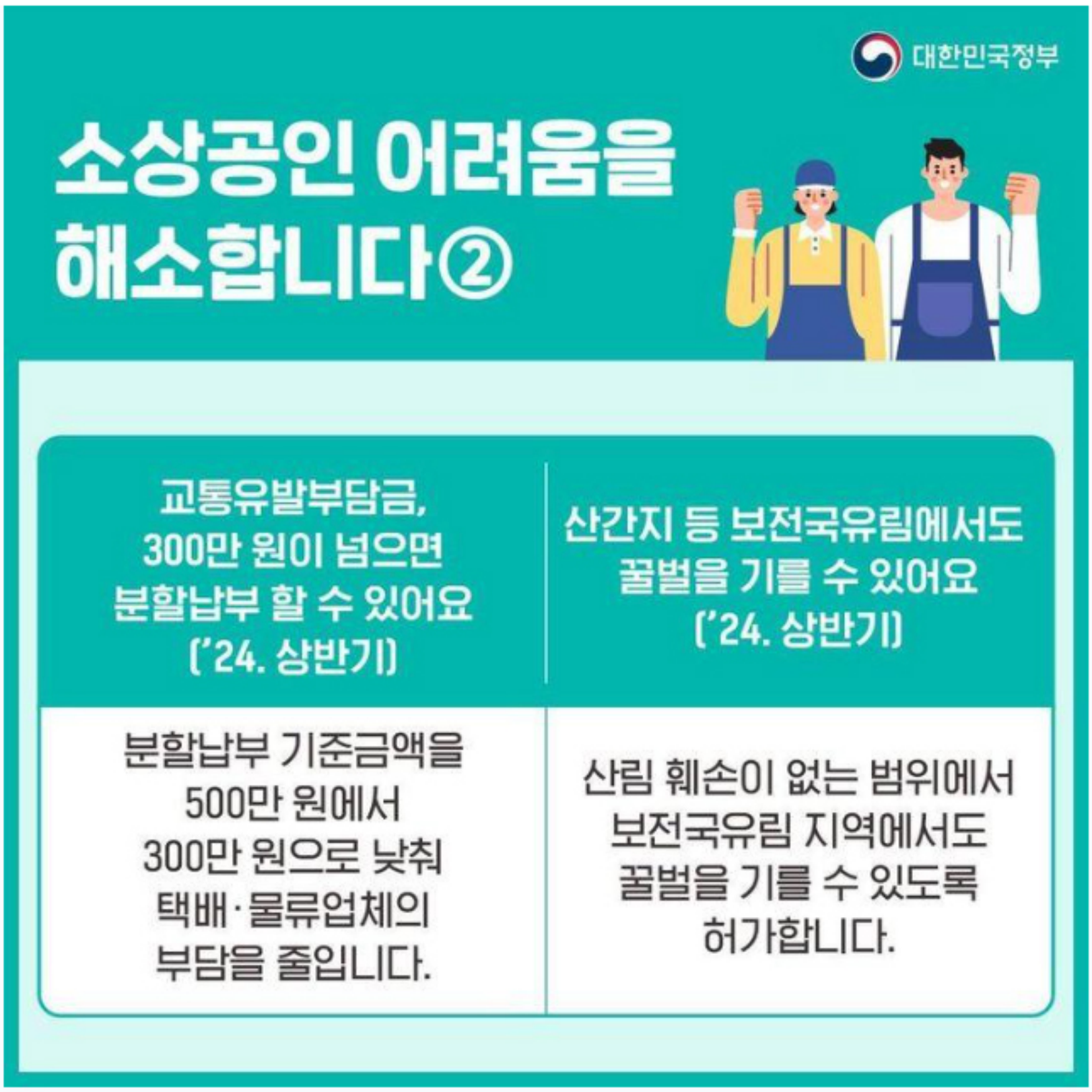
알기쉬운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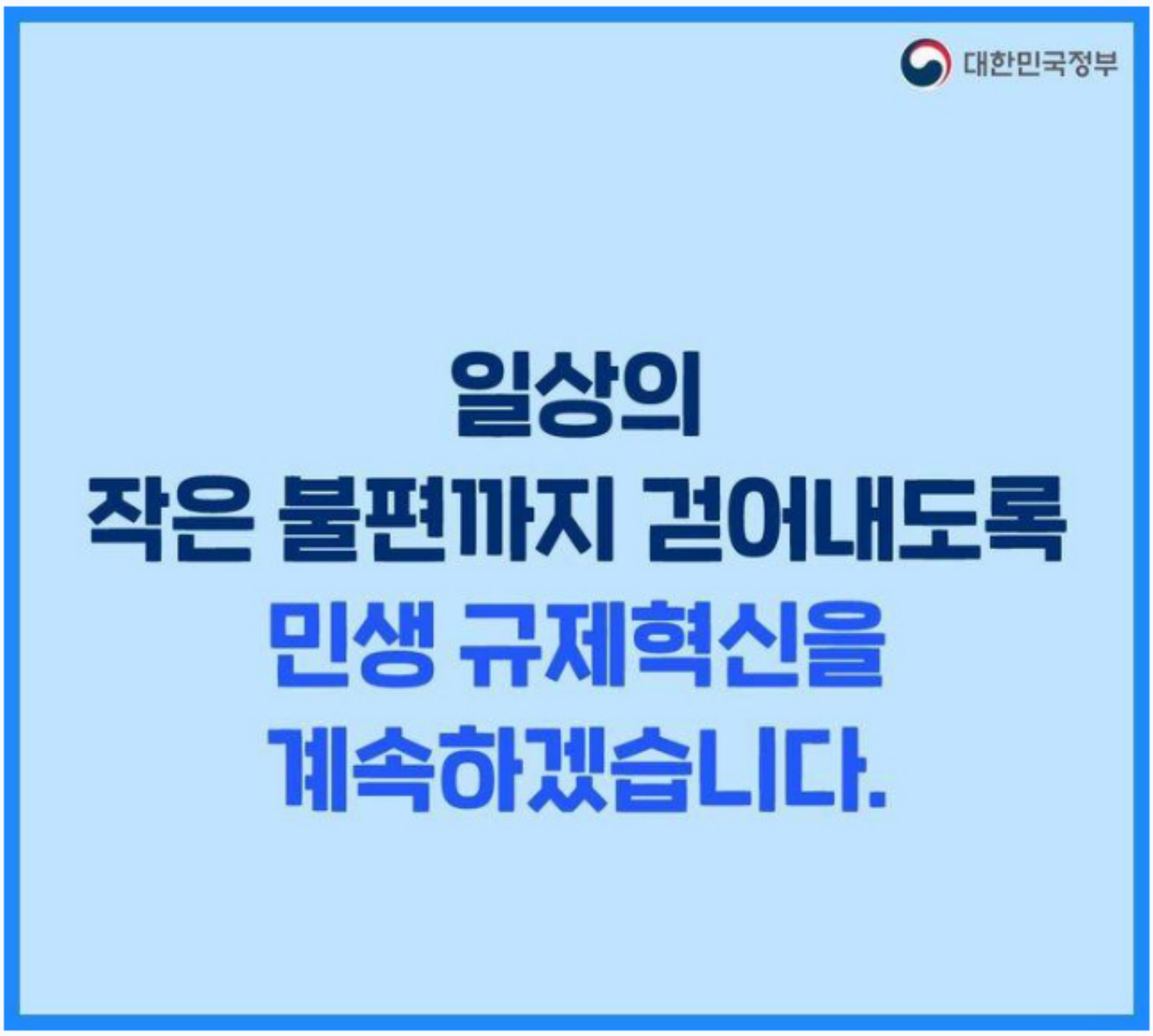
대한민국정부
불편을 줄입니다①
종량제 봉투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어요 ('24. 상반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안전성이 검증되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24. 상반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하고, 전입 지역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정부
불편을 줄입니다②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23. 하반기)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NLL 접경지역 어선 출입신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24. 상반기)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비대면 신고'를 허용해 어민 불편을 줄입니다.

알기쉬운 정책

대한민국정부
힘든 분을 돕습니다
성인이 된 중증장애 자녀·손자녀, 노인복지주택에서 같이 살 수 있어요 ('23. 하반기)
어르신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증장애 자녀·손자녀는 19세가 넘더라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이동형 X-ray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 ('24. 상반기)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대한민국정부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합니다①
음식점에서 보다 쉽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요 ('24. 상반기)
인력난을 호소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도 음식점업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아요 ('24. 상반기)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악의적 방법으로 숙박시설 혼숙 시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합니다.

알기쉬운 정책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문화체육관광부)